

건설업 취업자·수주금액 지속 감소

48만7천명 건설업 종사 2년전보다 4만4천명 줄어 발주금액 8,081억원 18.4% 감소 ... 지원책 시급

건설경기 침체 속에 도내 건설업 취업자 및 수주금액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11일 동북지방통계청과 강원건설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5만7,000명으로 전년 동월 5만6,000명에 비해 1,000명이 늘었다.

그러나 이 같은 증가현상은 지난해 극심한 수주난 발생에 따른 통계적

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며 도내 건설업 침체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.

지난해 4대강사업 마무리로 도내 공공공사 발주금액이 줄어든 데 반해 올해 원주~강릉 복선전철사업이 본격화되며 도내 공사현장이 증가했기 때문이다.

실제 2년 전에 비해서는 올해 건설업 취업자 및 수주금액이 크게 줄어

들었다. 올해 1~9월 도내 건설업 취업자는 총 48만7,000명으로 2010년 같은 기간 53만1,000명보다 4만4,000명이 줄었다.

또 일반건설업계의 1~8월 도내지역 공공공사 발주금액은 8,081억원으로 2010년 9,575억원에 비해 1,494억원(18.4%)이 감소했다. 특히 2009년 1조166억원보다는 2,085억원(25.8%)이나 줄어 수년째 건설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.

지역 건설업계는 이 같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대형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를 확

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.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발주 시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명확히 해 참여지분을 높이고 대형공사에도 도내 업체의 의무 공동도급 참여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.

강원건설단체연합회 관계자는 “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도내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”며 “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 및 대형공사 추진 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하위윤기자 faw4939@kwnews.co.kr

지자체 공사 도급제 추진

김기선 의원 법률안 발의

지역내 모든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·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추진된다.



새누리당 김기선(원주 갑·사진)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'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'을 발의했다. 정부는 4대강 사업,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공사 등에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의무적으로 만들었지만, 이는 2013년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조치다. 서울/박지은